보도자료

기획재정부

보도일시	2017. 11. 2.(목) 15:30	배포일시	배포시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강기룡 (044-215-4530)	담당자	배준형 사무관 (044-215-4531) 박정열 사무관 (044-215-4532)
	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 조희수 (042-481-1681) 벤처투자과장 박용순 (042-481-4416)		이종우 서기관 (042-481-1682) 정강은 사무관 (042-481-1685) 곽재경 서기관 (042-481-1640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안창국 (02-2100-2867) 자본시장과장 박민우 (02-2100-2650)		전수한 사무관 (02-2100-2861) 오형록 사무관 (02-2100-2937)

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 발표

◇ **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**

◇ **벤처확인제도를 혁신·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**

◇ **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·분사창업 활성화**

◇ **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,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,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**

□ 정부는 11.2일(목) **김동연 부총리** 주재로 **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**를 개최하여, 「**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**」을 발표하였다.

○ 同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**혁신성장 추진전략**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**첫 번째 대책**으로,

○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**혁신창업 활성화**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다.

Ⅰ.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

□ **[추진배경]** '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**혁신창업 생태계**의 **역동성**과 **활력**이 전반적으로 **저하**되는 추세

○ **(창업)** 벤처기업 수 등 **양적 지표 양호** ↔ **기회추구형 창업** 비중이 낮고 **고학력 우수인력**의 창업 **부족**

* 기회추구형 창업 : (美) 54% (韓) 21% / 창업자 중 석박사 : (美) 40% (韓) 14%

○ **(투자)** 美·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**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**가 **부족**하고 **모험자본** 성격도 상대적으로 **미흡**

*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('15년, %) : (美) 0.33 (中) 0.24('14년 0.11) (韓) 0.13

○ **(회수·재도전)** 코스닥·M&A 등 **회수시장 비활성화**, **사업실패**에 대한 부담, **재도전 환경 취약** 등 고질적 문제 지속

⇒ 정부 주도의 **점진적·분절적 정책**에서 벗어나, **'민간'**과 **'사람'** 중심으로 **혁신창업 생태계**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

□ **[추진방향]** **우수인력**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, **벤처투자**를 통해 **성장**하는 **"혁신창업 국가"** 실현

< 3대 추진방향 >

① **우수 인재**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**혁신창업**에 **도전**하여 **글로벌 기업으로 성장**할 수 있는 **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**

② 혁신창업기업에 **적극 투자**하고 **투자**의 **성장과실**이 **공유**될 수 있도록 **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**

③ 「창업→실패→재도전」, 「투자→회수→재투자」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**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**

Ⅱ. 세부 추진과제

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

❶ 기업·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

○ **(사내벤처·분사창업) 대기업·중견기업**의 **우수인력**이 적극적으로 **혁신창업**에 나설 수 있도록 **특화지원 프로그램*** 운영

* 모기업 先투자 + 정부 후속지원('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),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, TIPS 방식의 R&D·사업화·마케팅 패키지 지원

○ **(대학·출연硏 인센티브 개편)** 창업실적·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**교원·대학·출연연 평가**에 반영 유도, **휴·겸직 기간** 및 **조건 완화**

○ **(창업유형 다양화) 다양한 분야·배경·세대**의 인재들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**정책적 지원*** 강화

* [팀창업]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, 자금지원시 우대
[숙련창업] 청년·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
[재창업] 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
[사회경제형 창업]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 신설

❷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

○ **(벤처확인 전면개편) 혁신성·성장성** 높은 기업들이 **벤처기업 인증**을 받을 수 있도록 **민간 주도***의 제도로 과감히 **전환**

*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, 대출·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(90% 차지) 폐지

○ **(TIPS 방식 확산) 민간** 자율로 **대상**을 **선정**하고 **정부**가 **후속지원**하는 TIPS 방식을 **창업·벤처정책 전반**으로 **확산***

* '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·창업도약패키지 등 우선 적용, '중장기 전환 로드맵' 마련

○ **(기술금융 활성화)** 혁신기업이 **기술력**을 바탕으로 **소요자금**을 **금융기관**에서 원활히 **조달**할 수 있도록 **인프라·제도 확충***

*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·적용, 모태펀드內 지식 재산권 펀드 신규 조성, 금융연수원·대학원에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

❸ 창업 걸림돌·애로·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

○ **(부담금·세금부담 경감)** 창업기업에 대한 **부담금 면제**를 대폭 **확대***하고, 재산세·취득세 등 **조세감면****** 방안도 적극 추진

* 일몰기한 5년 연장(~'22년), 면제부담금 확대(15종) 및 대상 추가(지식서비스업 포함)
** 창업 3년내 재산세 100% 감면,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

○ **(창업플랫폼 구축) 국민참여**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**메이커 스페이스**를 **전국적**으로 **조성***

* '22년까지 일반형 350개, 전문형 17개 구축,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, 아이디어가 사업화·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 → '18년 예산안 382억원

○ **(창조경제혁신센터)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**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**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**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선
지원체계	대기업 경직적 매칭(일방지원)	중견·벤처, 대학 등 자율참여(상생협력)
지자체 참여	자율적 참여 부족	적극적 참여·협력
센터 기능	창업, 중기지원,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	초기창업 + 투자기능 집중, 센터별 특화

○ **(창업공간 확충) 판교창조경제밸리**를 **혁신 선도모델***로 개발하고, 전국 **11개 도시첨단산단**으로 확산 (※ 11월중 발표)

* 43만m^2 규모, 창업초기·벤처기업 1,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

❹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

○ **(성장지원 강화)** 창업 3~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**창업도약패키지** 규모를 현재('18년 예산안 500억원)보다 **2배 확대**

○ **(혁신형 조달제도)** 창업기업의 **판로 확보**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**공공조달 혁신방안** 마련 (※ 11월중 발표)

-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**소규모 계약**(2.1억원 미만)에 대해서 **실적제한제 폐지** 및 **적격심사제** 전환

-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**혁신적 제품·서비스**의 **개발** 및 **구매**를 촉진하기 위해 **경쟁적 대화방식*** 도입

*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, EU·英 등에서 운용중

○ **(글로벌 스타기업 창출)** 매년 **우수기업 20개** 선발 후 집중지원(최대 45억원), **해외진출** 지원을 위해 **외자유치펀드** 조성·운영

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

❺ 재정·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

(※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·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·발표)

○ **(혁신모험펀드)** 향후 3년간 **10조원** 규모의 **혁신모험펀드**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**모험자본 공급**을 획기적으로 **확충**

- **성장단계별 투자대상**을 차별화하여 **모태펀드**와 **성장사다리 펀드**에 설치·운영하고,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**모험성 강화**

- 신규 출자에 필요한 **3조원 내외**의 재원은 ①**펀드 회수재원**·②**재정**·③**정책금융 출자** 등을 통해 조달

○ **(대출프로그램)** 신·기보 등 **정책금융기관**과 **민간자금이 함께**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**자금공급**(20조원 규모) 연계 추진

- **M&A, 사업재편, 외부기술도입, 설비투자** 등 **종합 지원**

○ **(모태펀드 특화) 일자리 창출** 우수기업, **지방기업, 사회적기업** 등 **국정과제**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 강화

❻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

○ **(엔젤투자 소득공제)** 은퇴자·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**소득공제** 혜택을 대폭 **확대**

현 행		개 선	
투자구간	소득공제율	투자구간	소득공제율
1,500만원 이하	100%	3,000만원 이하	100%
1,500만원~5,000만원	50%	3,000만원~5,000만원	70%
5,000만원 초과	30%	5,000만원 초과	30%

○ **(스톡옵션 비과세) 핵심인재**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**비과세**를 10년만에 **재도입**

*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

○ **(우리사주 소득공제)** 창업자-근로자의 **동반성장**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**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**(400만원→1,500만원)

○ **(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)**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운영기반 정비(법령 개정) **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*** 적용

*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, 개인 출자금의 10% 소득공제

❼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

○ **(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)**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**관련 규제**를 **완화***하고, **사후감독 강화** 병행

* [업종제한]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
[발행한도]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(現 7억원) 상향

○ **(벤처투자 제도 통합)** 벤처법·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**벤처투자촉진법**으로 일원화하고, **규제적용 최소화**

○ **(창업투자 규제혁신)** 신규 사업자들의 **창업투자 시장진입**을 촉진하고 **자유로운 투자*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

(★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**대표 규제혁신** 사례로 중점 추진)

- 창투사의 **자본금 요건** 하향(50억원→20억원), **전문인력 자격 요건** 완화(자격증·학위→창업·투자경험)

- 창업기업 **의무투자비중**(40%)을 창투사 규모별로 **차등화**, 사행성 업종 外 **모든 업종**에 **벤처투자 허용, 해외투자** 제한 합리화

3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

❽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

(※ 12월중 「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」 발표)

○ **(코스닥) 시장기능 회복** 및 **활성화**를 위해 **제도·규제**를 **정비**하고, **연기금**의 **코스닥시장 투자** 확대 유도

- **코스닥위원회**의 **독립성**을 획기적으로 **강화**하여 유가증권시장(KOSPI)과의 경쟁을 촉진하고, **진입규제·관행 재정비**

- **연기금**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**벤치마크 지수** 및 **기금운용평가 개선** 추진

○ **(中企 전용시장) 코넥스시장 소액공모** 한도 확대(10억원→20억원), **K-OTC**내 **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** 신설 및 **활성화*** 방안 강구

* 사실상 모든 중소·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, 협의거래·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,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

⑨ 기술혁신형 M&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

○ **(기술탈취 제재)**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**선제적 직권조사**를 실시하고, **징벌적 손해배상**의 **적용범위 확대***

* (현행)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-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→ (개선)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

○ **(M&A 인센티브 확대)** 혁신기업 M&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**제도 개선** 및 **세제지원 확대** 등 추진

- 피인수 벤처·중소기업의 **中企 지위유지 기간**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추어 **연장**(3년→7년)

-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** 인수·합병시 적용되는 **세액공제 요건 완화**(인수·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삭제)

⑩ 재도전·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

○ **(연대보증제 폐지)** **정책금융기관**의 연대보증을 **전면 폐지**('18.上)하고, **보증부대출** 등을 대상으로 **민간금융권**으로의 **확산** 유도

- **도덕적해이 방지**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**보완책** 병행

○ **(재기사업자 지원)** **재산압류·신용정보·조세채무** 등 **부담**을 **완화**하고 **재창업**을 **지원**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

- 개인파산시 **압류재산 제외범위**를 상향 조정(900만원→1,080만원)

-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**성실경영 평가제도**를 **개선***하고, **연체·체납정보**의 **공유·활용제한 확대****

*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
** (현행) 금융기관간 공유·활용 제한중 → (추가) 개인신용등급 반영 제한

- 모태펀드내 **재기지원펀드**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% 이상 투자, **재도전 지원 프로그램·센터** 확대

※ <별첨>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